

# 질문 · 탐구하는 전북교육 '청사진'

### 천호성 교육감, 교육인권 보호 · 기초학력 책임제 · AI 기반 미래교육 · 지역교육자치 강화 등 제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인권 보호와 기초학력 책임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지역교육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북교육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전북교육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자율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학생과 교직원 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관 도입과 관계 회복지원단 운영, 교육인권 소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예방과 대응 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교육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유학'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전북유학생을 현재 333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운영학교도 44개교에서 6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혁신선도지역 5곳 이상을 선정해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전북교육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기 위한 합의를 감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 감사관 중심 체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감사계획과 결과, 처분 요구 등을 합의제로 심의·의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비위 등을 전담 조사하는 감찰팀도 새롭게 설치한다. 기초학력 책임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학생 개별 맞춤형 진단과 심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교실과 학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연계한 다중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학교 내 기초학력 전담교원과 협력강사를 확대하고 매년 50개 학교에 기초학력 지도실을 구축하는 등 학습안전망도 강화한다.

학생들의 독서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독서 300 프로젝

트도 추진된다. 온책읽기와 온책읽기, 온책읽기, 온책읽기, 온책도서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교과 연계 독서수업, 학생 저자 출간, 독서토론, 해외 진로연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업과 평가 역시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전문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초등학교는 학생 성장 이력을 관리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중등은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와 성취평가제를 고도화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교육과정평가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AI 기반 교육혁신도 본격 추진한다. 10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에 전북 특화 서비스를 구축해 AI 진단평가와 생성형 AI 수업도구, 자동채점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선도교사 양성과정 현장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원의 AI 활용 역량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AI 기반 진로진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북 진로진학교육원' 설립도 추진한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활용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함께 하는 도전학교도 운영한다.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프로젝트 기반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모형을 지원한다.

지역교육자치 강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교육장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모제로 선별하고, 14개 교육지원청별 교육자치협의체를 운영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학부모 학교가 함께 지역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10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비전과 슬로건, 5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건강한 디지털 사용 문화 정착

### 전북교육청, '스마트폰 선포학교' 본격 추진

### 4개년 계획 수립... 하반기 준비학교 5곳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선포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스마트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디지털 기기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선포학교' 4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된 데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인 1스마트폰 사용 기준과 지도 방식이 달라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가 이어져 왔다.

'스마트폰 선포학교'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잠시 멈춤을 실천하며 배움과 친구 관계, 다양한 체험 활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법과 자율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용 기준 마련 △디지털을 대신할 다양한 오프라인 성장 경험 제공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

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 생활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 기준 예시안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독서와 놀이, 체험활동, 또래 관계 형성 등 스마트폰을 대신할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디지털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공정화와 사업설명회를 거쳐 준비학교 5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준비학교는 학생생활규칙 개정과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가정·지역사회 연계 교육, 운영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하며 '전북형 운영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표준화해 '전북형 디지털 균형 교육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폰 선포학교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위해 전북교육청은 △법과 자율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용 기준 마련 △디지털을 대신할 다양한 오프라인 성장 경험 제공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

/오상근 기자

# 아름다운 화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 전주학부모 여성합창단 보훈요양원서 나눔 공연

전주학부모 여성합창단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을 찾아 아름다운 화음과 다양한 공연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 소속 전주학부모 여성합창단은 8일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이 특별 기획해 지난 2023년부터 이어온 행사로 올해 네 번째를 맞았다.

합창단은 공연에 앞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간식 150인분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최형 회장을 비롯한 전주학부모 여성합창단원 60명이 이우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아름다운 합창 공연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전주학부모 여성합창단은 8일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단원들은 합창뿐 아니라 설장구 공연과 우쿨렐레 연주, 라인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마련해 행사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형 전주학부모 여성합창단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작은 노래 한 곡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선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주학부모 여성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학원 지도 · 점검 결과 정기적 공개

### 학부모 알 권리 확대 · 투명한 사교육 환경 조성 위해

### 전북교육청, 행정처분 현황 · 주요 위반 유형 누리집 게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내부 자료로 관리해 온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는 도민 누구나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개 자료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창의인재교육과 자료실에 게시되며, 2026년 2분기 지도·점검 결과부터 공개를 시작했다. 이후에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

처분 현황, 주요 위반 유형 및 예방안 등 통계와 유형 중심의 자료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처분 이 최종 확정되기 전 피처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별 학원 명칭과 대표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식별 가능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지역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 학습 성장 지원

###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우리 함께 드림업' 추진

전북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 지역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의 학습 성장 지원을 위해 '우리 함께 드림업(Dream up)'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의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업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단은 학습지 및 방과후 교육비 지원 학습 수준 진단,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자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한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해 저소득 아동의 교육 격차 완화

와 학습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영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운영위원장(전북대 사회복지학)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영양실무사 노조 "재배치 계획, 학교급식법 왜곡·단체협약 위반"

전국교육공무직원본부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영양실무사 재배치 계획에 반발하며 강제 이동 철회와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원본부 전북지부는 9일 오전 전북교육청 본관 2층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을 왜곡해 영양실무사의 강제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배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재배치가 교육청의 인방적인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기존 단체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양실무사는 지난 2012년 2·3식 운영 학교의 급식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배치됐다.

### 전북교육청에 중단 등 촉구

이후 교육청은 2024년 말 교육간과 영양교사 간담회 이후 3시 학교에 영양교사 2명을 배치하는 방침을 결정했고, 올해 봄에 일부 학교의 영양실무사를 다른 학교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반말로 재배치가 무산됐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 배치 계획을 통보했고 지난 6월에는 대규모 1식 학교로의 재배치를 결정해 노동조합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교육청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으며, 단체협약 제49조에서 규정된 '배치 기준 변경 시 사전 협의와 노동자 동

의 없는 정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 급식 담당 부서의 의견과 교육청을 근거로 "학교급식법 개정 이전부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추진해 놓고, 이후 법 개정을 이유로 영양실무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해 급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 영양실무사를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시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교육청이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양실무사 강제 이송배치 계획 즉각 철회 △

단체협약 준수 및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학교급식법 취지 왜곡 중단과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해하는 일방적 행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원본부 전북지부는 "영양실무사는 학교급식을 책임져 온 교육의 동반자"라며 "교육청이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전국교육공무직원본부 전북지부가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습